

第220回國會 失業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第3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4月19日(木)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501호)

議事日程

- 1. 실업대책현황보고(계속)
 -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나. 행정자치부소관

審査된案件

- 1. 실업대책현황보고(계속)
 -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1
 - 나. 행정자치부소관 1

(14시18분 개의)

○**委員長 金炯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尹斗煥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尹斗煥委員**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난번 회의에 참석 못 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고 적극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을 포함한 청소년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 12.8%로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취업상황도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정보통신분야 IT 인력이 2004년까지 15만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기업 3D업종이 인력난을 겪는 등 인력수급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 상황과 인력육성계획을 연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와 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에서 대졸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수요에 부응할 인력을 양성할 중요한 책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여 이런 방향에서 오늘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지금도 실업대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생산성 등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고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소관 실업대책에 관한 현황보고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1. 실업대책현황보고(계속)
 -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나. 행정자치부소관

(14시21분)

○**委員長 金炯昨** 의사일정 제1항 실업대책현황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6일 제2차 회의에서 노동부로부터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실업대책들을 소관부처별로 보고를 받고 적절한 사업에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필요한 대책은 없는지를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졸실

그러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韓完相입니다.

존경하는 金炯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우리 부 실업대책추진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고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인성과 직업능력을 고루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출범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진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우리 부가 추진한 실업대책추진실적과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IMF 외환위기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단기일자리 창출, 실업자 취업능력 향상과 실직자 자녀 지원 등에 총 6,223억원을 투입하여 연 인원 96만명에게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어서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실업을 완화하는 보완책으로 실업고교, 전문대학, 대학에서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여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및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학력과 자격을 연계하는 능력중심의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李基雨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基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李相甲 학교정책실장입니다.

鄭冀五 인적자원정책국장입니다.

金京會 평생직업교육국장입니다.

具寬書 대학지원국장입니다.

金坪洙 교육자치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金炯昨 기획관리실장 보고해 주세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 李基雨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업대책사업 추진상황, 직업능력향상을 통한 청소년 실업대책,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활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대책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IMF 외환위기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단기일자리 창출, 실업자 취업능력 향상, 실직자 자녀 지원 등에 6,223억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96만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7년말 IMF 구제금융 여파에 따라 급증한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추진된 범정부적 실업대책에 동참하여 98년 이후 전문대학 재취업 교육, 각급 학교 보조요원 고용 등 10여개의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인 실업해소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2월 각급학교 전산보조원 사업의 완료로 현재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실업대책사업중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사업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尹斗煥委員 위원장님, 우리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전부 다 보고하고 나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중요사안만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싶은데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한 15분 정도만 걸릴 것입니다.

○尹斗煥委員 15분 넘게 걸리지요.

○委員長 金炯昨 교육인적자원부 보고사항이 길지 않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15분

내에 보고를 마쳐주도록 하세요.

○**教育人の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예, 앞으로 15분 이내에 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기관 등에서 단기 일자리로 5만여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였습니다.

취업능력 향상교육은 대학, 기술계 학원 등의 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여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4만여명에게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직자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비감면, 중식 제공 등 86여만명에게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청소년 실업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실업현황 및 취업률을 분석해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실업자는 금년 3월 중 25만4,000명이 발생하여 전체 실업률보다 높습니다. 즉 실업률이 4.8%인데 비해서 청소년 실업률은 12.8%입니다.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IMF 위기로 98년도에 50.5%로 취업률이 떨어졌다가 2000년도에는 56%로 다소 회복되었지만 2001년도에는 53.4%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대학졸업자보다 높은 편이나 2001년도는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의 여파로 취업률은 전년보다 다소 낮은 72%로 전망됩니다.

실업계고 졸업생은 취업률이 높은 반면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인문계고 졸업생중 비진학자는 청소년 실업자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에서의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업계 고교로 운영체제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자인고, 인터넷고 등 특성화 고교를 확충하고 첨단분야 및 지역수요에 기초한 학과개편을 지원하면서 실업계형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동을 통한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고 2:1체제를 운영하고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를 운영하면서 산업계 경력 인사를 산학겸임 교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고 실업계 고교 교원의 산업체 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전문대학에서의 실용적인 중견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필요한 분야의 수 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전문대학을 산업기술교육단지로 육성하며 특성학과 설치 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산업체가 요구한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고 및 전문대학의 심화교육을 위한 연계강화를 위해서 실고 전문대간 협약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의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학간 취업정보를 공유·활용하는 대학생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사회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IT, BT 등 신 산업분야 인력양성 위주로 학생정원을 증원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과 중장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및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학력과 자격을 연계하여 능력중심의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자 국가인력수급전망 종합백서를 2·3년 주기로 발간·보급하고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IT, BT, 문화 등 미래산업을 선도할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은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 문화부 등 관련부처와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고급두뇌 해외유출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또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투자를 범부처 차원에서 사전조율하는 고등교육기관 재정투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과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12개 부처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간 협력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공동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성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의 중복투자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또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열린 학습체제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정보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사이버대학 설치 등 성인 학습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확대를 유인할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점인정,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군 복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관련 법안 통합정비를 통해서 직업능력의 개발·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을 통합한 가칭 자격의관리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민간자격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여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급 인력 등 고급두뇌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분야별 고급인력 수급전망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의 전달체계와 진로지도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고급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DB를 구축하여 인력수요분야에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고 박사 후 연수과정사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학술연구교수제 도입으로 고용창출기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강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임교원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강사료를 올해 2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3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 신규교원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의 증원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3년 동안 1,600명을 증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적자원 개발·활용을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라든지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국립대학 전임교원 증원 등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炯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존경하는 金炯昨 위원장님 그리고 실업대책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단기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3년간 3조822억원, 국비 2조75억, 지방비 1조74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58만명, 연투입 9,747만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258만명에 이르는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실업자들의 생계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는 호적전산화, 국토공원화, 정보화사업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에는 경험 등이 부족하여 비효율성, 낭비성 등이 지적된 바가 있으며 이후 대상자 선정, 대상사업 발굴 등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업률이 계속 4.8%에 머물고 높은 실업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국비 2,00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4,600억원으로 23만명에게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4분기에 2,000억원을 투입, 10만7,000명이 참여하였으며 2/4분기에 1,400억원을 투입, 7만명이 참여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200억원을 투입, 4·50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생산성 있고 공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炯昨위원장님 그리고 실업대책위원님 여러분!

금년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죄송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部內 사정으로 오늘 차관보께서 설명을 드려야 마땅한데도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文洙委員 지방자치국장이 담당 주무국장이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金文洙委員 그러면 차관보가 안 오시고 바로 주무국장이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모든 업무를 다 상세하게 알고 있는 담당국장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보고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하나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예산이 2001년도에 1원도 없고 행자부는 여기에 보고한 것을 보면 4,600억이 있거든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金文洙委員**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 10쪽에 걸쳐서 보고서를 써 왔고 행자부는 표까지 합쳐서 그 절반인 5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육인적자원부에 비해서 행자부가 너무 실업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부족하고 국회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보고서도 원래는 아마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간략하게 해가지고 많이 추려버린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닐까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나중에 질의에 대한 답변과 또……

○**金文洙委員** 지금 그 부분을 답변을 잠깐 해주시지요. 우선 이 보고서 자체가 실업예산을 노동부 다음에는 제일 많이 쓰시는 편인데 너무 부실하게 이렇게…… 이것을 다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시고 보고는 간략하게 생략할 수도 있고 또는 5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마는 두 부처가 지금 같이 왔는데…… 물론 부총리 오시고 이런데 어떻게 실제 보고하는 것도 양 부처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金文洙委員** 그것 좀 상세하게 나중에 따로 공공근로 이것은 새로 하나 내주세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자치행정국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서면에 따라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 추진개요, 2001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IMF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그리고 단기일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실업대책 일환으로서 98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개요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사업은 분기별로 사업단계를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격과 선발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참여자격은 18세에서부터 60세의 구직을 등록한 실업자나 노숙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격을 부여하여 시·군·구에서 연령이나 재산, 세대주, 가구소득, 실업기간, 장애인, 자격 등 9개 요소에 따라서 고려해서 점수를 주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추진사업은 정보화사업 그리고 도로나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공공생산성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서비스사업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등을 하는 환경정화사업 등 크게 4대 분야, 91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근로조건은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노동강도에 따라서 최저 1만9,000원, 최고 2만9,000원 사이에서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해에 대비해서 모든 사업장에서 가급적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林仁培委員** 잠깐만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방에 보면 여기 보고서에는 세대주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실업기간이라든가 이런 주로 9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지방에 내려가 보면 행자부의 어떤 그런 지침이 잘 전달이 안 되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주로 농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중산층은 아니더라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 하는데 이것 행자부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9개 요소에 대해서 가중치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저희들 지침을 내려보내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林仁培委員** 이게 지금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나 구청에서 하지요?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그렇습니다.

○**林仁培委員** 행자부에서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대략 그저 지침만 내려보내니까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행자부가 물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선거를 하고 이러니까 좀 밑에서 말이 잘 안 먹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정말 공공근로사업을 시켜야 할 사람들은 안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체크 좀 잘 해 주세요.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알겠습니다. 현장 지도를 좀 잘 하도록 林仁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유념해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추진 중요방침은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에 의거해서 실업률이 가장 높게 예상되는 상반기에 역시 예산을 집중 배정하도록 하고 경기부양효과가 높으면서도 공익성과 생산성이 큰 지역개발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역시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총 23만명을 참여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의원님께서 책정해 주신 국비 2,000억과 지방비 2,000억 그리고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금 600억을 합쳐서 금년도에는 4,600억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4,600억에 1단계는 2,000억, 2단계는 1,400억 그리고 3·4단계는 각기 600억씩 투자를 해서 총 2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3월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된 대로 2,00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계획인원은 10만명이었습니다마는 10만7,000명이 참여해서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1단계 사업을 완료하면서 평가해 본 결

과 역시 동절기 일용근로사업자 그리고 재취업이 어려운 4·50대 중·장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보호하는 효과와 실업률을 다소 저하시킬 수 있는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학력 미취업자의 흡수를 위한 그러한 일자리 제공에는 역시 미흡했다는 점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장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 평가를 하고 2단계 사업 추진지침에 반영해서 시달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장감독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4월12일부터 4월14일까지 저희 부와 예산처,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7개 시·도를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는 제2차로 나머지 9개 시·도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金文洙委員** 점검 실시한 결과보고서나 뭐 이런 취합된 자료가 있겠지요?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평가보고서를 아직 작성을 못 했습니다.

○**金文洙委員** 나오는 대로 좀 보내 주세요.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미 1차로 점검한 것 나오기 전에 우선 계획서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 주시고 나오는 대로 결과를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2차 점검계획과 그 결과를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금년도 1/4분기 실업률이 예상과는 달리 4.8%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3월에도 실업률이 아직 100만명 이상 났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2단계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월9일부터 6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1,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만명을 선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

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사업의 추진 대비입니다.

하반기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을 비롯한 호적전산화사업 등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관계부처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개선·보완을 하고 또 하반기 사업지침에 반영해서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林仁培委員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시면 예산 4,600억 중에 주로 1·2단계, 전반기에 다 집행이 되어 73.5%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앞으로 일했던 분들이 3·4단계, 후반기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6만명 정도밖에 못하니까 명분뿐이지 공공근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없는 중단사황이 안 되겠어요? 예산상 도표를 보면…… 이럴 경우에는 정말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정부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후반기에 전반기 같이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실업자가 대폭 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실업대책을 이렇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이런 예산 가지고는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후반기의 추경문제를 지금 현재 추경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지금 실업률 추세로 본다면 한 3%, 4% 사이에서 머물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 실업률이 영 높아진다면 그리고 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林仁培委員 좋습니다. 결론을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관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전체적인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빠른 질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님 생각하실 때에는 앞으로 실업이 많이 줄 것 같아요, 어때요? 그 결론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측을 한번 해보시지요.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갑자기 그렇게 많이 실업자가 줄고 이렇게 어떤 비전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간단하게 결론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지금 현재보다는 실업률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 실업전망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당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전망을 한 것에 의하면 연평균 한 3.7%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2/4분기에는 3.8%, 하반기에는 3.4%정도, 한 70만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동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분명히 실업률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다면 분명히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 49%가 다운되었습니다.

○林仁培委員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다운된 이유가 행자부에서 정확한 통계라든지 하는 근거도 없이 하다 보니까 전체 실업예산이 실제로 3조4,000억 가까이 되다가 또 2조9,000억으로 줄었다가 이번 예산에는 또 한 2,000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이것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장관도 너무 자주 바뀌고 소신도 없고 전부 이리다 보니까 이것이 엉망인 것 같아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위원님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林仁培委員 잘해 주세요.

○委員長 金炯昨 부처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金文洙 간사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담당국장이 보고는 잘했습니다마는 국회를 상대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 행자부는 보고자의 선정이라든지…… 보고서의 내용이 아마 아침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 비해서 내용이 부실한데 이를 유념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처에서 신경 써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장관, 아시겠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시정하겠습니다.

○金榮春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炯昨 예, 말씀하세요.

○金榮春委員 金文洙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자부 보고자료는 오늘 아침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하면 실업특위에 보고를 적게 할까…… 사실은 어제 교육부 자료가 도착하고 난 뒤에도 계속 재측을 했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담아서 성의 있게 보고하려는가 보다 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사실은

정반대의 아주 무성의한 보고자료를 아침에 보내 왔습니다. 내용이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선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 3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분부분 자랑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제대로 된 보고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 자체도 부분적으로 틀린 모습도 있어요. 행자부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4,6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의 다른 자료에 보면 4,730억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보았더니 이월예산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 보고자료에는 6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730억 가량 되는 이월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내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전혀 준비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오늘 오전에나 자료를 보내는 이런 일들을 행자부가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이고 행자부가 하는 많은 사업들이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의 전형 아니냐 하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실업대책특위를 잠깐 지나가는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이때만 잠깐 모면하면 끝난다 그런 정신 자세로 특위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책을 하고 장관께서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대단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金榮春委員** 그리고 행자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예산 134억이 2001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예산은 올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마 교육부 보고자료를 봤겠지만 학교전산보조요원사업이 올 2월에 완료되었는데 2월 사업 예산을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2001년 예산으로 잡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134억이 잡혀서 총 2,500억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자료 아닙니까? 바로 교육부 장관께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의 신뢰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炯昨** 예.

○**金文洙委員** 장관이 처음 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행자부 보고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내용도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를 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우리도 제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는 따로 하루 날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서도 새로 만들고, 그동안 특히 국민들이 공공근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장관님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추후에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의 성과와 미비점…… 또 여기 읽어보면 마치 하반기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집중해서 예산을 다 쓰고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또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가지고는 실태파악이 제대로 어렵다고 봐서 따로 하루 추후에 날을 잡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점 감안해서 의사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炯昨** 金文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행자부장관도 이 점을 시인하고 있느니 만큼 또 오늘 모처럼 실업특위가…… 노동부 보고에 이은 두 번째 보고이고 또 교육부총리와 같이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교육부와 행자부의 보고를 일단 들어보고 또 우리가 내년 5월29일까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행자부는 특히 중요부처이기 때문에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들어보고 부실하다면 다시 간사들끼리 의논해서 보고를 또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질의도 국회법 관계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첫 번째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 할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崔榮熙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榮熙委員** 일괄질의하고 나중에 일괄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실업대책은 주로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과 재취업이 쉽지 않은 40대, 50대

연령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공공근로사업이 중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에 4,600억원의 사업비로 23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대책의 주무부처는 아무래도 노동부가 될 수밖에 없고 행정부는 자체적인 공공근로사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거나 감독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예산의 낭비나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부가 단순한 공공근로사업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근로시간 단축, 양성 평등적인 근로여건의 조성 등 필요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 서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월1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라는 연구논문에 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1989년에서 1991년의 경험을 토대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실근로시간, 임금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한 결과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고 노동단위비용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발생 이후 노동계로부터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요구되었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10월23일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여서 주 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고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임금·휴일·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실근로시간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해서 일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과 학교수업의 주 5일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환경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실업극복의 중요한 수단 하나를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

에 처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기존의 여가를 노는 것과 자기개발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일로 인한 스트레스의 감소와 건강증진, 가족과의 유대강화, 지역사회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의 기회 증가 등 개인생활과 가치관 자체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컸던 여성근로자에게는 가족을 돌보고 자신의 재교육이나 자녀양육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취업중단을 막고 계속적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등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창의성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높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근로자의 근로의욕 유발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비용중심적 경쟁전략이 아닌 기술·구조적 경쟁력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내수의 확대가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조화되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기존기업의 과잉근로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과 여가 및 레저관련산업의 활성화 등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져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극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는 지난 98년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해 주 35시간 근로제를 채택한 바 있으며 독일도 90년 이후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 노·사·정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1987년부터 주당 40시간 근로제를 채택해 오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지난 1938년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이래 최근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되면서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처럼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미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근로시간 단축논의를 본격화해서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극복의 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사회·문화에 미치는 큰 영향 특히 초과근로가 상대적으로 많고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할 때 부문·규모·업종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특성상 정부 및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므로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하며 근로자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정부 및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최근 노동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관공서·금융기관·대기업부터 먼저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그 뒤에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행정자치부의 고유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장관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업대책 차원에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업극복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이미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계속적인 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여성들의 근로여건 개선에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기업보다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양양군이 마련한 군수와 7급 이하 여성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성공무원들은 남성공무원들과 공채로 들어왔으나 항상 주요 보직은 남성들의 차지이고 여직원들은 민원창구만 지키는 신세로 전락했다, 능력 있는 여직원들을 기획·예산·인사 등 격무부서에 근무시켜 승진기회를 달라,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각종 행사에서 제외돼 항상 사무실지킴이로 남아 있다, 엄연히 담당업무가 있음에도 손님이 오면 차심부름을 도맡아 하게 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라는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여성정책 중점목표로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관별로 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기관 1인 여성국장 또는 과장제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 현재 전국적으로 1명뿐인 여성 부단체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단체장에게 권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여 1과 1인 여성제 및 동등한 보직 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에 여성참여를 촉구하고, 양성평등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직사회내 성희롱의 피해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하며, 자녀들 둔 정부중앙청사와 그 주변 여성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근 종교시설의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발표를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하면서 이왕 대책을 세우는 김에 여성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시정해야 할 사항 한 가지를 더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분야의 모든 근로관계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여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8조입니다.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9조입니다.

또한 임신 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2조제2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3조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이 여성에 대한 과보호여서 오히려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복무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공무원 특히 우체국 등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대책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부문에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인원의 배치가 잘 되지 않아 인원은 줄고 업무는 증가하는 부서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들이 격무와 과로로 인해서 유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민간에게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강제하면서 정작 정부는 관련규정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여성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공무원복무규정에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炯昨 崔榮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의 사정상 일괄 질의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한 10분 이내에 일괄 질의를 해야만이 나중에 답변시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실업특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실 사항이 많더라도 실업특위라는 초점을 중심에 놓고 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金文洙 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文洙委員 교육부총리에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실 올해 예산 중에 실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업대책위원회에 오셔서 특별히 이렇게 보고를 하시게 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하기로는 요즘 청년실업자가 너무 많다, 청년실업자의 비율이 아마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최고 실업률,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데 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친구들이 실업자로 평생을 살거나 또는 취업하더라도 그 취업상태가 너무나 열악해서 그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시간제 근로, 임시직, 인턴 이런 것만 하다가 평생 정규적이고 정상적인 일자리를 못 가지고 자기 일생을 마칠 수가 있다 하는 사회적 불안감이 극도로 팽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쓸모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현상이 다 청

년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면 첫째는 학력별 실업률 그러니까 고졸자, 중졸자, 대졸자, 전문대졸, 대학원졸 이 학력별 실업률 통계를 노동부에서 만들었던 통계청에서 만들었던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에서 했던 그런 것을 혹시 부총리께서 보신 적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자세한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金文洙委員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부총리께서 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과연 학력이 어떻게 실업과 연관이 되는가 또는 학력 중에서도 어떤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가, 요즘같은 전산정보부문은 실업률이 아주 없다 싶을 정도로 일부러 특별히 양성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독문과를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주 실력이 좋아도 실업자로 전혀 취업도 안된다든지 등등 이런 것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때 바로 우리 교육이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에 맞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인적자원개발부로 전환된 중요한 동기가 바로 우리 金文洙 위원이 제기하신 그 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육이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공급만 했거든요. 그것도 수요도 학력별로 그리고 또 학교 수준별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백서, 통계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앞으로 만들어야 할 큰 국가적 과제입니다.

○金文洙委員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의 계획서를 한번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금 통계가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알겠습니다.

○金文洙委員 특히 최근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부실화 또는 졸업 이후의 진로의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 관심이 많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고 당사자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업고등학교 또는 상업고등학교, 전산정보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등 실업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대학 중에서도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취업에서의 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조사나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지금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전체 고교에서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金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업계 고교가 잘 안되는 이유가 인문계 고등학교의 승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특별히 21세기가 요구하고 우리 나라가 요구하는 무슨 디자인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조리, 정보, 애니메이션 이런 과를 특성화시키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런 계획도 조금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알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청소년들에게 향후 10년 후의 직업전망예측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들이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할 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미리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를 교육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을 듣고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교육인적 자원부가 되면 미래에 관한 예측을 하게 될 것입니다.

○**金文洙委員**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직접 당사자인 청소년들한테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도 이번주 무슨 주간지를 보니까 거기도 크리어리즘이라든지 크리텐셜리즘이 깨져 가지고 대학의 칸막이 과목, 전공분야에서 배출되는 사람들이 10년 후에 가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해야 할 겁니다.

○**金文洙委員** 그 부분을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내주시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알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다음에 행자부장관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문제가 많다는가 또는 통계 자체가 부실하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 보고서 2쪽에 나와 있는 연 참여인원이 23만명이라는 것은 연 인원이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연 인원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래서 이것도 남들이 들으면 23만 명이나 실업자들이 구제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사실상 공공근로자도 실업자입니다마는 실업통계는 또 안 잡힙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동일한 사람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잡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실제 인원이 몇 명이나 하는 것을, 지난 연도에도 연 인원은 몇 명인데 실제로 몇 명의 취업효과를 가져온 공공근로를 했느냐 이런 것을 한번 구분해 낸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알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리고 올해도 연 인원은 이렇지만 실체는 이 정도쯤 된다는 자료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을 공공근로같은 경우는 특히 낭비성이 많고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평가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엄밀하게 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야만 바로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업평가 자체가 대단히 엄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 3쪽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시다마는 행자부, 예산처, 노동부 합동으로 7개 시·도 현장점검을 한다든지 전 부분에 대해서 엄밀한 점검체계를 가지고, 특히 행자부 자체내에 이 점검체계가 있습니까? 합동으로 하는 것 말고 상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자체내부의 점검평가감사기구같은 것이 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지금 행자부 내부에는 과가 하나 있습니다. 각 시·도의 과를 통해서……

○**金文洙委員** 그것은 집행부서일 거고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일단 집행하는 사항을……

○**金文洙委員** 집행부서와 다른 어떤 평가점검시스템이 있느냐고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단독으로는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자체에서 저는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상근으로 하지 않더라도 외부인이나 시민단체 같은 사람들로 구성해서 점검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쓰니까요.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별 실업률 통계를 내달라고 제가 15대 때부터 한 4년 이상 주장했는데 아직 안 하는데 지금 보면 광역자치단체별 실업률은 나

와 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시·군·구별 기초자치단체별로 집행되는데 시·군·구별로 예산은 집행하면서 통계는 광역 단위로 하니까 집행과 통계 자체가 맞지 않는데 시·군·구별 실업통계가 없어서 실업률의 파악이 안됨으로써 실업예산 배정이 대단히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 그러면 공공근로참여자, 그래서 실업률이 아주 높은 그런 고실업지역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단체장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요인이, 비경제적인 요인이 많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이 국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객관적인 것은 실업률이라고 봅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실업률과 그 당시 신청자 수가 얼마나……

○**金文洙委員**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없는데 신청자라는 것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역시 실업률이 아니겠나 싶은데 가장 객관적인 실업률 통계가 없이 그냥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행정의 자의성, 정치적 고려 이런 것이 너무 많이 개재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실업률이 높으면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되고 예산배정비율 자체도 실업률에 대한 예측모델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4월에, 상반기에 선거가 있으니까 4월까지 왕창 퍼붓고 하반기는 모르겠다 또 하반기에 불가피한 사태가 일어나면 추경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좋은 의도의 공공근로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비판적인 결과가 많이 오지 않느냐 저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재정경제부장관이나 통계청장관한테 얘기하셔서 돈이 들더라도 기초자치단체별 시·군·구별 실업통계를 만들어달라, 통계청 답변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할 것인데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그중에 부산시가 연속 8년간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더라도 부산광역시 2001년3월 실업률은 6.7%입니다. 특별히 부산시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나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단독 선두인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자체별로 보면 시·군·구별로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실적이 부진한데 예를 들면 작년 하반기에 전국에 259개 시·군·구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올해 최근의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 7월 현재의 실적을 가지고 본다면 259개 대상기관 중에 취업실적이 한 건도 없는 곳이 137개로 과반수가 넘습니다. 취업이 아니라 알선실적도 하나도 없는 곳이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등 49개소이고 구리시청의 경우에는 2000년1월부터 7월까지 취업실적이 1,619건인데 전부 공공근로이고 공공근로를 제외하면 진짜 취업알선한 것은 31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취업실적이 많다고 보고하는데 공공근로 빼고 나면 사실상 취업실적이 없는데 그만큼 행정자치부가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일선 골목골목마다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진 조직은 결국 행정조직이라고 봅니다. 행정자치부 조직 이상을 능가하는 행정조직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각 시·군·구, 읍·면·동까지 조직을 갖춘 행정자치부가 이 문제를 좀더 관심있게 보신다면 상당한 실업대책상의 진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개선계획같은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경편성계획이 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상반기에 몇% 배정하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70%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하반기에 30%가지고 되겠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나중에 관계부처와 협의의 하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지금부터 추경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런 입장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나 이 보고서를 보면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炯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允式 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允式委員** 경기도 용인출신 민주당 金允式 위

원입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하는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위원님께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행정자치부에 지탄이 많으셨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서를 보니까 저도 차라리 안보느니 못하다 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업대책은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21세기 생존전략에 어떤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교육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韓完相 부총리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부장관이 국민의 정부 3년 동안 여섯 번 바뀌었고 지금 교육이민이라고 할 정도로 교육이 위기입니다.

(金炯旣 위원장, 朴仁相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께서 취임하실 때 많은 기대를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업무과약이 제대로 안되셨고 이런 보고서가 흔히 있지만 이런 교육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할 정도로 너무 상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라니까 IT, BT인력이라고 IT, BT가 마치 단일과목이 있는 양 그러는데 IT, BT가 뭘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보고 하면 웃습니다. BT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만들어낸 말입니다. BT를 정확히 풀면 바이오테크놀로지같은데 생물공학이라고도 하고 생명공학이라고 혼동해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쓰시던데 생물공학이라는 것은 모든 기초과학을 배경으로 두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놈연구나 이런 것이, 미국에 BT라는 과목이 있습니까?

추상적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없고 또 고급두뇌의 해외유출 방지대책, 이런 것은 朴正熙 대통령시대의 보고를 그대로 쓰시는 것 아닙니까? 고급두뇌의 해외유출 방지, 지금 이런 말을 씁니까? 서울대에서 떨어진 입시생이 하버드, MIT에 되었다고 해서 두뇌유출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없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국가적인 위기인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총리께서 취임인사를 하실 때 창발력있는 인력개발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창발력있는 인력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방향제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입시제도와 교육제도가 대폭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저희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기획단을 통해서 동남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푸둥을 다녀왔습니다. 전부가 IT라든지 BT 해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교육인적자원개발, 대학의 과감한 인력배출, IT분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더만 해도 지금 막대한 인력을 외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40%·50%가 인도 사람이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미국에서 IT인력 16만5,000명을 채용할 때 한국까지 전세계에 의뢰했을 때 인도 사람이 14만명이 왔습니다. 한국은 거의 한 사람도 안 되었습니다. 아마 아주 극소수가 갔을 것입니다. 사이버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국제전화인터뷰를 했었는데 한국 사람이 전부 영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데 과연 이 사이버시대에,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이라는 시각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갖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독일의 교육부는 3년 전에 5,000명의 박사급이 10년간 연구한 보고서, 소위 유명한 텔파이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에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은 어떤 자원이 될 것이냐 해서 교육제도를 대폭개선하고 있습니다.

鄭冀五 국장님께서 같이 우리 정책기획단에 계시는데 텔파이 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教育人的資源部人的資源政策局長 鄭冀五 예.

○金允式委員 지금 독일은 과감하게 교육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IT·BT의 마치 단일과목이 있는 양 하는 대책, 과연 교육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또 부총리께서는 사학의 기여입학제에 관해서 TV에 나와서 하실 때 ‘한국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총리께서도 상황논리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명분에 현실에 우리 국익이 다 없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학의 위기 또 사학에서 직접 총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이 되는 방향에서도 얼마든지, 사학이 발전이 되어야지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못 쫓아가면 안 됩니다. IT BT가 엄청난 사학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런 단일과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연 IT·BT의 중점인력 교

육양성을 하시고 창발력있는 인력개발 또 입시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인력개발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실무자들의 보고가 과거에 있던 그런 보고서라면 죄송하지만 부총리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金允式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책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오늘 이 자리는 실업문제이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우리 부의 종합적인 비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비전 이야기는 지난번 대통령께 드리는 업무보고서에 아마 金 위원님께서 조금 더 만족하실 수 있는 자료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실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IT쪽은 벌써 구체적인 사람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업대책과 연관된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IT를 넣은 것이 추상적으로 관념적인 장난을 하기 위해서 IT·BT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집권당에서 이 심각성을 좀더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T도 그렇습니다. 개념같은 이런 쪽은 사람이 없고 생물학은 사람이 넘쳐흐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1세기가 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BT, 바이올이든지 바이오든지 그런 최첨단분야는 없고 각 대학마다 생물학과는 많이 있잖습니까? 그 쪽은 또 과잉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BT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관념적으로 대학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金 위원님께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OECD에 늦게 들어갔지만 제가 OECD교육장관회의의 부의장이 되어서 3박4일 해보니까 인도는 물론 우리보다 IT 쪽에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분야에 있어서 정보화는 세계최고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하는 시간을 곧 또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인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뒤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급인력유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제가 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학생이 아이비리그에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유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하고 나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해서 유출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이 조금 부정적이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학기여금에 대해서는 제 소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수준에 올라가서 특정사립대학이 기여입학제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위화감을 안 느끼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 안하는 수준까지 가면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사학의 기여금을 허락하게 되는 경우에 국민위화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낮은 사학이 타격을 굉장히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TV에 나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金允式 위원님께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允式委員 그리고 21세기 정보화 사이버월드에서는 영어가 거의 공용어화되고 있는데 영어에 대한 교육대책, 영어를 공용어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오늘 마침 서브젝트가 단기적인 실업대책에 대한 분야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단기적인 실업대책으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崔榮熙 위원님께서 시간단축, 워크 셰어링(work sharing), 일자리 나누기를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얼마 전 일본 NHK가 더치 미라클이라 해가지고 네덜란드가 워크 셰어링으로 해서 완전히 성공한 그런 케이스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한킴벌리에서는 워크 셰어링으로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로 해가지고 얼마전 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을 보통 3조 3교대 또는 2조 2교대식인데 예를 들면 4조 3교대로 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에 일부는 의무적으로 일부는 임의적으로 해서 소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리지워커 교육을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전문인력이 자동양성이 되면서 결국은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짐으로써 결국은 추가인력을 채용하는 사례로 유한킴벌리의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노동부장관이 나오셨을 때 본 위원이 참여를 못해서 제안을 못 드렸었는데 인력개발이라는 하나의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실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정책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金允式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仁相** 金允式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仁培 위원님.

○**林仁培委員** 林仁培 위원입니다.

먼저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로 취임하신 韓完相 부총리께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똑바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졸실업자 급증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년대 대졸자 취업률이 약 70%를 차지했는데 오늘날에는 50%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적자원부에서는 재취업교육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취업교육대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졸실업자들을 위한 정보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방법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기간이 1개월 내지 6개월로 고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면 교육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것은 우리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탄력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林仁培委員** 두 번째는 대졸자 실업대책의 근본적인 실업원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대책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대졸실업자 급증의 원인이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대학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林仁培委員**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또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을 하고 교육정책과 인사정책을 통합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대졸실업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로 대학교육이 노동시장과 연결되는 실용성 있는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진로지도와 진로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고 세째로 새로운 직업정보 및 직업상담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고 네 번째로는 각종 노동시장정보도 동시에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대졸실업자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 효과적인 대책이 있으면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지금 林仁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다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에 전부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 인적자원부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된 지가 불과 2개월 반밖에 안되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林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培委員** 예, 후배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되는 데 대해서 자긍심도 좀 모자라고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韓 부총리께서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재임기간 동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감사합니다.

○**林仁培委員** 다음은 행자부장관님에게 아까 빠진 것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가지고 저도 그 당시 공공근로사업을 정부에서 많이 추진할 때 나는 저것보다는 차라리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철원까지 아니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고속도로를 놓으면 그 돈 가지고 나중에 도로라도 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힘도 없고 정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공공근로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추경예산이 나왔는데 추경을 과연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있고 이것을 좀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이점을 좀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되어서 잘 하고 앞으로 계속 실업자가 구제가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실업자가 되고 말아요. 그 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방안이 있겠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공공근로사업까지 그 사람의 취업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실업된 사람을 한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차원에서 소위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전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의존한다는 것은 실업대책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林仁培委員** 그렇지요, 일시적인 IMF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林仁培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仁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榮春 위원.

○**金榮春委員** 金榮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총리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실업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부가 만든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특위 회의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실업률이 15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계인데 과연 이 통계가 의미가 있는 통계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상 15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작 의미 있는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기준으로 잡지 말고 실제로 실업률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통계를 만드는 것이 적합한 청소년실업대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19세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실업률을 잡는다, 혹은 20대 실업률을 잡아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청소년실업률 12.8% 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의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동의하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통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개연성밖에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지요.

○**金榮春委員** 아마 아주 높은 비율로 실업률이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소년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20대 실업의 경우에 청소년실업으로 한정 짓지 말고 저는 그것보다는 20대 실업률이라고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대 실업률은 사실상 구조적인 실업입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배출하는 인력의 질과 준비된 정도 또 본인의 희망, 출신학과 그런 공공요소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요소가 근본적으로 불일치하는 데서 나타나는 구조실업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료에도 보면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국가인력수급전망종합백서를 이삼년이라는 아주 Short-term으로 만들어보겠다 라고 하는 의욕적인 계획도 세우고 계신데 우선 이 문제만 한정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 종합백서를 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교육과 산업정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총체적인 국가인적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안에 미래산업의 전망이나 변화, 발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어떤 교육과정의 적합성문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여하는 그런 부서나 혹은 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것이 바로 인적자원개발국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차관보를 신설했지요.

지금 金榮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서가 될 것입니다.

(朴仁相 간사, 金炯旣 위원장과 사회교대)

○**金榮春委員** 예, 고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더 근본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공급구조가 참 많이 왜곡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아마도 이런 구조적인 실업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보고자료에도 보면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80년에는 73%였다가 85년에는 52%로 뚝 떨어집니다. 이 근본적인 배경은 신 군부가 집권을 해서 졸업정원제와 함께 대학입학정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 세배 가량 늘어났지요. 늘리면서 이공계통에는 정원을 늘리기 어려우니까 인문사회계통에 우선 강의실에 많이 몰아넣고 대형강의실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원을 많이 늘려주었습니다.

80년 통계와 85년 통계에서 급격한 취업률의 하락, 실업률의 증대는 바로 그 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년대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이과반이 약 80% 정도 되고 문과반이 한 20%, 혹은 적은 학교는 10% 정도의 비율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는 아마 배 이상의 비율로 인문계 고등학교 안에서 문과반과 이과반의 비율이 문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서 과연 인문·사회계통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급격하게 제고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냐는 것이지요. 지금 시점이라도 교육부가 대학의 학과별 구조 또 정원 T/O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재수립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군에 걸맞는 인적공급을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덤벼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학교가 스스로 과나 과별 정원을 조정할 수 탄력성을 부여해 주는 그런 측면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은 또 거꾸로 교육부가 가급적이면 간섭을 덜하면 훨씬 더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공급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세우시고 또 한편에서는 가급적 규제나 관여정책을 축소하는 절묘한 배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코멘트할 여유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金榮春委員** 그러면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앞으로 부총리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시고 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金榮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春委員** 그런데 지난 2월23일 정부가 실업대책이 다시 급해졌다고 해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들은 대부분 예산이 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대책부터 내놓고 그래서 문제도 생기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청

소년실업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2월의 보완대책에서도 청소년실업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소년실업문제, 20대 실업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여해야 될 교육인적자원부는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작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가 할 일이나 이렇게 따진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까지도 꾸준히 실업대책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었다 말이지요. 이번 보완대책의 예산측면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빠져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우선 청소년 실업률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덜 구조적이기 때문에 통계도 명확치 않고 그래서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20대라고 하면 구조적이어서 조금 쉽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국가·사회·산업계가 요구하는 분야의 인원을 공급하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히 예산을 따겠습니다마는 실업한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春委員** 가령 예를 들면 중앙부처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올해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전체로 2,500억 정도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전혀 예산이 없는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金榮春委員** 사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나중에 행자부에도 묻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 근로사업은 거의 효용성이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는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은 그나마 실효성도 있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대책은 되고 있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나중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春委員**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처간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힘을 좀 넣어주세요.

○**金榮春委員** 교육부에서 부총리까지 되셨으니까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생산성 있는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 쪽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행자부장관님하고 의논해서 같이 합시다.

○金榮春委員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통계문제 가지고 여쭙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치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부정적이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저희들하고 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처의 입장에서는 항상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보다…… 전체를 생각해서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비취질 때 그렇게 비취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도 역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春委員 그런데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 말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에서 대폭 삭감을 하자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물론 올해 예산도 많이 삭감된 결과이기는 합니까마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올해 약 49% 삭감되었습니다.

○金榮春委員 그 중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더 삭감하자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기에는 경험도 없었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격에 따라 낭비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12일부터 14일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조사 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 보고가 안 나왔습니까마는……

○金榮春委員 장관께 보고는 되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아직까지 결과가 안 올라와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자체도 건설해졌고 옛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취로성 사업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분히 생산적이고 복지·후생적으로

그리고 SOC사업 쪽에도 뻗치는 등 아주 건설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에서도 회의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金榮春委員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대책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생계보전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양면이 다 있는데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저희들은 지금 실업대책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대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으로서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榮春委員 그런데 실업대책에 더 강조를 둔다라고 하면……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실업대책도 실업자들의 한시적인 실업기간에 생계를 보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金榮春委員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인 경우에 그 소득은 공제되는 것이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공제됩니다. 그것보다 차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자활공공근로자의 경우입니다.

○金榮春委員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노동부 질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의 강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까마는 최고로 치면 2만 9,000원, 20일을 일하면 거의 약 55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도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실업대책이 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인력수급구조를 왜곡시키는 역기능을 발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3D업종에서는 일자리가 아직도 남아돌고 외국인력들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 약 20만명 정도의 일손이 부족하다 그런 상황인데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일자리에 가서라도 일을 하던 사람들이 편하게 일을 하지 실제로 산재보험까지 다 가입해 준다고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까지 필요 없는 편한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일자리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시늉만 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렇게 편한 일을 하지 왜 3D업종에 가서 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일시적으로 실업을 당해서

막막한 사람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긴급구난의 성격으로서 대책을 세우고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겠습니까마는 또 한편에서는 정부가 우리 사회의 인력수급구조에 대해서 보다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전망과 대책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고 이 두가지가 조화가 되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초기단계에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근로의식의 왜곡 혹은 도덕적인 해이감까지 만들어 내는 그런 역기능을 발휘하는 측면이 더 많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현재 시점에서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그래서 현재 소위 편안한 데에 안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년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하는데 3단계까지만은 허용을 합니다. 4단계까지 받겠다하는 사람은 4단계에서 취업을 안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金榮春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장점검 1차를 했고 곧이어 2차 점검을 하는데 점검결과 장관께서는 많이 견실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점검결과 보고를 보고서 이것이 도대체 생산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런 사업 아이템을 축소시켜 버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생산적인 일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또 한편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겠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金榮春委員**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金榮春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炯昨** 金榮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민련 간사위원이신 曹喜旭 위원 질의

해 주세요.

○**曹喜旭委員** 자민련의 曹喜旭입니다.

부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정부질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들어서 여섯 번째로 탄생한 장관입니다. 이 여섯 번째가 국민의 정부가 끝날 때까지 가실 수 있도록 확실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시고 특히 부총리께서는 상당히 색깔이 있는 부총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이 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잘 이끌어 주어서 청사에 빛나는 韓完相 부총리가 역시 잘 했다, 역시 멋있는 교육부총리다 이런 소리를 국민으로부터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질의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업률이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높아졌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대책 사업이 올해부터 전면 중단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먼저 모두에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曹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2000년 동절기 실업대책사업인 초·중등 전산보조원 5,070명 사업이 올해 2월까지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 부의 실업대책이 현재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로 끝났습니다.

○**曹喜旭委員** 추경예산이 확보된다면 교육부에서 실업자 구제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 하나가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비교육적인 잡무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 잡무를 덜어주는 학교업무 보조원을 실업대책으로써 쓰고 싶습니다. 한 960억 가까이 돈이 드는데 추경이 될 수 있도록 曹 위원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합니다. 된다면 그것도 한 115억이 드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曹喜旭委員** 98년 이후에 3년간 실업대책이 한시적인 비상대책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부 관련사업의 예산 6,200억 중 예비비를 포함한 교육부 자체에 연간예산으로 조달된 비중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曹喜旭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曹喜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 이후 교육부 실업대책예산 중 우리부 예산이 아닌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집행된 대학원 연구과정은 정통부로부터 예산을 전입받아 집행하였고, 학교급식은 99년8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이 50 대 25 대 25이므로 이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액은 약 78억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 예산 160억원을 제외한 우리부 예산은 6,063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曹喜旭委員** 지금 우리 나라 고등학교과정에서 전문직업훈련정책이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위주의 입시행정 및 학력위주의 사회분위가 맞물려 실업계 고등학교는 마치 사양화되어 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으레 노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학부형의 선호도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먼저 법대 보내고 판·검사시키고 싶은 생각, 인문계쪽·사회과학 쪽에 선호도가 있고 해서 국가사회의 산업계가 요구하는 첨단 빼놓고는…… 실업계 가는 사람들이 갔다가 중도에 많이 탈락되고 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曹喜旭委員**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함축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이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보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령상 학생들의 지식습득능력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전문학교나 대학교에 못지 않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습기자재 확보 지원 예산을 늘려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북돋아줘야 합니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습기자재는 산업현장에서 보면 몇 세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선반 하나 또 밀링 겨우 한 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 가봐도 몇 백년 전 고물기계만 갖다 놓고…… 무슨 전시장 같아요. 실업계 고등학

교 실습기자재 예산지원 및 현황, 첨단기자재 확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수ちに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曹喜旭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보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 예산 354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기자재를 위해서 53억원을, 또 공업고등학교의 첨단학과 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86억원을, 조리·미용 등 가사계열은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노후 기자재 대체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예산, 120억원을 확보하고 멀티미디어실 기자재도 75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實高 기자재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자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가일층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올립니다.

○**曹喜旭委員**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이것 이론교육도 아니고 실기교육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화됐고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긍지를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면 군에나 가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고 또 교사들이 사기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문자 그대로 실기를 겸한 이론을 해야 됩니다. 이론을 겸한 실기가 아니라 실기를 겸한 이론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왜? 시설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 몇 마디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3D업종 중에 생산직 직원이 없습니다. 각 공장에는 기계는 서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기계를 스톱시켜 놓고 3D 업종이랍시고 외국의 불법 체류자를 갖다가 고용하는 이런 기현상이 펼쳐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총리께서 확고한 신념을 갖

고 이 나라 백년대계를 위해 기술산업입국을 위해서라도 기자재에 대해서 실업계에 많은 지원을 절대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인문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는 쓸모가 없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하면 상당히 쓸모가 많습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자재도 사용할 줄 모르니까 1년간의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중소기업 공장 같은 데 가보면 다시 재교육시켜야 돼요.

그래 가지고 안전사고도 유발시키고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실업계의 교육부재 현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曹喜旭委員 지금 실업계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로 보더라도 지금 보면 인문계하고 이공 또 공대계통을 보면 실업자수가 8 대 1 꼴입니다. 이공계나 공대계통은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채용하는데 인문계통은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두 사람 뽑는데 8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공이나 기계과, 전기공학과 이쪽을 뽑으려니까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안 와요. 이것 기현상이야, 교육부 재입니다.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선진대국으로, 부존자원 하나도 안 나는 나라에서 이론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 현장에 안 가려고 그래요. 이 교육도 고쳐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냥 설계나 하고 적당하게 컴퓨터나 두들기고 그러지 현장에 가서 기계와 함께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왜? 기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를 상당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부총리, 안 그렇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좋은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曹喜旭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교육에서 인원 배정할 때 인문계보다도 이공계통, 공대 쪽으로 학생 수를 정책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기본적으로

로 국가산업이 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하고 산업계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방향은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曹喜旭委員 지금 부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중소기업은 저임금은 물론 고급인력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최첨단 고급기술개발은 필수과제입니다.

고급기술인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자연계 박사과정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는 전문연구요원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을 병무청, 과기부, 교육부 등등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무청과 국방부하고 관련된 문제이겠습니까마는 지금 중소기업 같은 데는 연구요원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 또 대도시의 근교 같은 데는 그런 대로 교통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지방 같은 데 중소기업에는 연구개발요원들이 없습니다. 많은 돈을 주더라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연구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나마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현재 3,500명이 전문연구요원으로서 국방부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맞습니다.

○曹喜旭委員 이 중에서 교육부에 할당된 것이 500명입니다. 이 500명을 갖다가 국방부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대학지원 국장 대답해 보세요.

○教育人的資源部大學支援局長 具寬書 대학지원 국장입니다.

曹喜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연구인력에 대한 확대문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曹喜旭委員 ‘협의 검토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부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산업 일선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요원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지금 현재 기대를 하느냐 하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전문연구요원제, 군에 안 가고 병역을 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꼭 국방부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을 확대를 시켜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길이 바로 교육부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알겠습니다.

○曹喜旭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炯昨 曹喜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樂冀 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樂冀委員 한나라당 金樂冀 위원입니다.

교육부총리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월13일자 정부가 4·50대 중·장년층 보완 실업대책을 수립해서 내놨습니다. 거기 첫쪽에 보면 금년 1월중 청년실업자가 25만명을 넘어서고 실업율이 11.3%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졸자 49만명 가운데 16만명이 미취업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고학력 실업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동의합니다.

○金樂冀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IT 분야는 오히려 14만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IT분야 관련학과는 2001년4월 현재 155개가 산재해 있으며 새롭게 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도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IT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첨단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21세기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학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서 부총리로 승격시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총리로 승격을 시켜서 좀 힘있는 부처로 만들어 가지고 관계부처간 정책조정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학연계를 위해서 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내용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그 견해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개혁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가 수요로 하는 구체적인 인력을 교육이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과과정, 아까 金榮春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학과나 이 모든 적합성이 없는 것을 고쳐주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리고 자료 7쪽에 국가인력수급전망종합백서를 2, 3년 주기로 발간·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정확한 인력수급전망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인력수급전망종합백서에 관한 구체적인 발간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2, 3년 주기로 해서, 그런 백서가 있으면 어느 부문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데 학교가 과연 그 수요를 충족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까지 공급 측면만 해왔는데 수요 측면을 고려해서 공급하는 정책을 실행하려면 기본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종합백서이고 그 주기를 2, 3년으로 짧게 해서 매 2, 3년마다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金樂冀委員 앞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행사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단기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행사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전체 실업대책 예산 5조 6,000억원 가운데 18%가 넘는 1조원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98년 5월부터 2000년 말까지 총 3조822억원, 국비가 2조75억원이고 지방비가 1조747억원입니다.

○金樂冀委員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률을 단기간 내에 낮추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지적 받으셨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한 결과 최근에는 최대한 보완이 되어서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렸습시다마는 지난번에 1차 관계부처 합동 심사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자평을 했다는 것에 할 말이 없는데 우리 국민이 평가해 주어야지 행자부 스스로가 자평을 백번 잘 했다고 해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행자위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마땅한 일거리가 없자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을 걸고 몇 백명을 동원해서 황소개구리를 잡는 사업을 전개한 적이 있지요, 장관님 잘 모르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행자부 간부 누구 나오신 분 있어요? 담당국장, 그런 사실이 있지요?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환경정화사업분야라고 해서 한 분야가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가 직접 시행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황소개구리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국회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이것이 과연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놀고 먹자는 식의 공공근로…… 그런가 하면 3D 업종의 중소기업이나 농촌에서는 일손이 모자라도 일꾼을 구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공공근로사업한다고 황소개구리 잡는다고 해놓고 하루 종일 몇백명이 황소개구리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과연 공공근로사업이고 실업대책이냐?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구난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파악해 보세요. 내가 회의록에서 파악한 것입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그 당시의 확실한 연도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보도를 통해서 언뜻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

서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초기에 그런 여러 가지 낭비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공부문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갑자기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모르고 할 때 환경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金樂冀委員** 갑자기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두 번 합니까? 60년대부터 미군법 480호에 의한 자주근로사업 했지요, 그 이후에 일반영세민 취로사업 했지요. IMF 이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유사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당시 PL480사업이나 영세민 취로사업은 실업대책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보호하는 측면에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문제가 와서 하나의 실업대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거의 유사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내무공무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다니요.

국장, 방금 황소개구리문제 국감 때 주무국장 하셨어요?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예, 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런데 주무국장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金樂冀委員** 국감이 언제 끝났는데 이제 파악을 하다니요. 그러니까 행자부가 앉아서 탁상행정만 했지 실지 현장점검과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의 증거로 주무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무국장이 확인을 못하고 있으면 말이 돼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이같은 문제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金樂冀委員** 행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올해 1/4분기 동안 사오십대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아까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실업자 가운데 사오십대 중장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

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주무국장 답변해보세요.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지금 현재 자격요건을 35세에서 50대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숫자는 제가……

○金樂冀委員 35세가 중장년층에 들어가나요?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사오십대를 말씀하시니까…… 그 층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몇 % 인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樂冀委員 자료를 내는 것은 좋은데 97년도 13%에서 2000년도 20%로 증가했습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金樂冀委員 관계부처간에 이런 실업대책 인쇄만 해가지고 홍보활동하고 선전만 하는 것이지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노동부 자료를 보세요. 부처간 협조가 안 되고 각자 부처이기주의로 자기 것은 자기가 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무국장이 비율이 얼마인지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중·장년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樂冀委員 대책을 세우려면 비율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그렇습니다.

○金樂冀委員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히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약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부가 바로 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만 많은 투자를 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는 소홀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고 또 예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부양하는 성격인데 실질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행자부 차원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부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金樂冀委員 지난해 11월과 98년11월의 통계청 고용동향을 비교해 보면 이런 문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건설 일용노동자하고 하역노동자 등 단순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률 저하는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올해 실업률이 5%까지 올라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단순노무직이라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참가자는 최장 몇 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1·2·3단계까지 할 수 있으니까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현실에 안주할까 봐서 이 사람이 몇 번째나 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면 바로 실업자가 되지요? 행정자치부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취업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지방에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3D 업종으로 연계시키고 일자리가 부족한 데하고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지금까지 정보센터의 운영실적이 어떠한지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렇다면 행자부가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안정된 일자리를 알선한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알겠습니다.

○金樂冀委員 장관님,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줄이고 직업훈련 강화, 재취업 연결망 보강 등 중·장기적 대책에 실업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행자부가 마련하고 있는 중·장기적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저도 공공근로사업이 항구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한시적인 실업자 구제대책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SOC사업에 투자를 하고 지방재정도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IT, BT 같은 산업에다 지방재정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도시의 달동네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투자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 실업대책을 운위할 것이 아니라 행자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하고 늘 실무진에 지시를 해놓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주장 자체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줄여 나가야지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자체가 생산현장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역작용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료 1쪽 공공근로의 근로조건에 보면 주 5일 8시간 근무·노동강도에 따라서 1만9,000원, 2만4,000원, 2만9,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金樂冀委員**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주말을 제외하고 월 22일 매일 나갔다고 할 적에 최저 41만 8,000원, 최고 63만8,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4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최저임금은 4인 가족 생계비가 아니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일당 1만4,920원, 월 42만1,490원입니다.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7만개나 되는 일자리가 일손을 구할 수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사람이 넘쳐나는 기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행자부가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공공근로예산 얼마 땀다, 땀으니까 그냥 쓰자 또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선거 때 공공

근로예산 풀어서 인심 쓰고…… 그런 것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실업대책을 하는 곳 이니까 그런 정치적 발언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관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여하튼 대통령님께서도 3D 업종으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보센터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여하튼 3D 업종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이것이 다 하고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임금역전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좋은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金樂冀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金文洙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밖에 잠깐 나간 사이에 자료 3쪽에 나와 있는 7개 시·도 현장점검, 장소점검 내지 시정사항 등 점검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金文洙 위원에게만 드릴 것입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전 위원에게 다 드릴 것입니다.

○**委員長 金炯昨**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간사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신 朴仁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朴仁相委員**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고한 내용중에 실업대책 1쪽입니다.

교육기관 등에 단기 일자리로 5만여명 인력을 직접고용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보조 교사라든가 전산보조원이라든가 기능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세어보면 2만3,000명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98년도부터 99년까지 진행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백지로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실 분, 누구 있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平生職業教育局長 金京會** 평생 직업교육국장입니다.

아까도 부총리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동절 기사업으로 전산보조원사업을 올 2월까지 끝마쳤

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99년 하반기부터 다소 내려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국가재정형편상 저희 순위가 뒤로 설정되어서 추가사업을 못했습니다.

○**朴仁相委員**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부가 실업대책을 세우는데 실업의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 예측이 상당히 빗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실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 들어와서 실업률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예측했고 또 금년도 정부의 보고사항을 보면 실업률을 3%대로 잡겠다고 공식적으로 국회연설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쳐다보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실업률을 세우는데 예측가능한 것을 세우지 못하고 전혀 빗나가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님께서 저와 의견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차라리 지금 이렇게 실업률이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하면 각 부처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달려들어서 어느 분야든 간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는 돈이 배당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할 것이 없다, 마치 이 보고서를 쳐다보면 '소관사업 없음' 이렇게 잘라 버렸을 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실업률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측을 못해서, 어찌 보면 인적자원을 생산해 내는 생산부서지요. 연구인력을 길러내고 기능인력을 길러내고, 인적자원부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고 또 그것이 국가기간산업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저도 이 보고서를 읽고 갑자기 실업률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해서 朴仁相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업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가 8페이지까지 나간 것이고 만약에 다시 예산이 주어진다면 지금 1만개 학교가 있는데 교사를 잡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일에 보조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960억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데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인력지원사업에도 115억이 들어가는데 1년간 1,512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朴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교육부가 이런 실업대책에 다른 정부기구와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委員** 교사들의 잡무를 도울 수 있는 보충인력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1만개 학교에 한 분만 가도 1만명이 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재교육기회 제공 및 인재할당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소관법률에 평생교육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이 법에 보면 평생교육의 이념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업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들의 재교육기회 또한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교육법이 작년 3월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실업자들에 대한 재교육기회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지금 우리 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29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확장하도록 우리 부가 애쓰고 있고요.

또 취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성인학습자의 재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사내대학 1개를 했고 사이버대학을 올해 9개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정보와 취업정보를 연계하는 평생교육 종합정보망을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OECD에서는 평생교육이 국력의 핵심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아무튼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모든 기회를 다 가질 수 있고 소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적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장애인, 지방대학졸업생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취업이 잘 안 되는 계층에 대해서 인재할당제를 통해서 구조적인 취업난을 극복하자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추진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이것이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을 경북대학의 박 총장께서 하시다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거울삼고 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러면 그 법률에 인재할당제라는 용어를 쓸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아마 그 용어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리고 아까 첨단분야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金榮春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마는 그리고 이것은 曹喜旭 위원도 말씀했습니다. 마는 결과적으로 대학의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쓰는 사람하고, 다시 말해서 결국 배출된 인력과 현장에서 쓰는 인력간에 균형이 맞지 않으니깐 사람은 많이 배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교육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정부의 교육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아까 존경하는 金榮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육의 맹점은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급만 해온 것입니다. 물론 수요 중에는 산업수요가 제일 큼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인적자원개발부로 개편된 것 아니겠습니까?

○**朴仁相委員** 결과적으로 인적자원부가 노동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각 대학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해서 대학은 거기에 걸맞는 교육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렇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朴仁相委員** 어떻게 보면 실업대책을 놓고 교육부에서는 현장에서 투입될 수 있는 좋은 인재만 열심히 키워 주시면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아직도 인재 양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번을 기회로 소신껏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감사합니다.

○**朴仁相委員** 행정자치부장관께 우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金文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8세에서 60세 구직등록한 실업자·노숙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98년 이후 현재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공공근로에 참여한 현황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공공근로 중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98년 이후 현재까지 공공근로 중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다친 것은 한 3,200명 정도 됩니다.

○**朴仁相委員**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까 1단계 사업이 3월30일 완료되고 4월12일부터 14일까지 행자부, 예산처, 노동부 합동으로 7개 시·도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같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24일부터 26일까지 9개 시·도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이 계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각 위원들한테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朴仁相委員** 그 다음 건설 일용근로자의 공공근로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는 특히 건설경기가 침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요인도 어떻게 보면 건설경기 부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노동부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18억원의 예산으로 동절기 건설 일용직 직업훈련을 1일 1,000명씩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건설 일용직노동자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일용직 실업자는 단 며칠간의 일감이라도 생기면 공공근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朴仁相委員**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공공근로사업 초기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건설 일용노동자 중 약 15%가 공공근로사업 참여
를 신청했는데 이중 약 3%만이 실제 참여한 것으
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일용노동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시행 및
참여기간을 1주 내지 2주 단위의 사업부터 1년 단
위의 사업까지 사업단위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자치행정국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朴仁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 일
용인부에 대해서 공공근로에서 흡수할 필요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
취업이 어려운 사오십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공
공근로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건설인력으로
나갈 수 있는, 취업능력이 있는 사람에 초점이 맞
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검토하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仁相委員** 특히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
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성과로 지적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 가능한 사업을 정규 일자리로
전환하거나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전환해서 국가가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되겠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
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仁相委員** 장관님은 검토가 주종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장기적인 일자리가 되
려면 적당한 보수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경기가 좋
아지면 임금 격차 때문에 그것이 과연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 또 저희들이 그것을 보장
해 줄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朴仁相委員**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공공근로

를 하나의 재취업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
것은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공근
로사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의의를 가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단기적으로 끝나 버리는 그런
상태로 계속 되어지면 별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재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도사업으로 선택되
어진다면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 부만 하더라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정보화와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일 하는 것에 비해서 임금을 충분하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도 많
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방향이고 그렇
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진지하
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리고 자료가 부실하다고 했으니
까 정확한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炯昨** 朴仁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 安泳根 위원 질의해 주세요.

○**安泳根委員** 安泳根 위원입니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는 행자부라고
간략하게 호칭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떻게 약
칭할 수 있는 것입니까?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교육부로 부
르게 되어 있습니다.

○**安泳根委員** 교육부장관께 여쭙어보겠습니다.

현재 고학력 실업에서 차지하는 대부분이 지방
대 졸업자들이 많고 지방대 졸업자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인
데, 그래서 교육부가 2월26일 지방대학육성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 출신자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내
년 상반기에 지방대육성에관한특별법을 한시적으
로 제정해서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방대
출신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특별법
을 만드는 것이 기업에 강제성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기업에서 지방대 출신자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강제성 말입니까?

○**安泳根委員** 예.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법을 제정해서 시행해 보지도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安泳根委員** 지방대학 육성대책이나 지방대학생 취업우대에 대한 권고 같은 것이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도 계속 실현되지 않고 마치 장애인이나 여성고용을 권장하는데 기업주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듯이 현재 지방대 출신들을 채용하지 않는 기본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기업은 자기 기업내용에 맞는 사람을 선발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법으로 과연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북대학에서 나온 안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쓰는 엄청난 비용에 해당되는 것을 지방대학육성비로 내고 기업도 지방대학출신을 쓰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을 한번 시행했다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올리는 법 가운데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력채용시 응시기회를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이나 지방에서 공부한 사람이나 균등하게 주도록 법에 규정해 놓으면 역시 시행부서의 입장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安泳根委員** 응시기회를 준다고 해도 선발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아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것이 우리 나라 기업풍토의 문제인데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安泳根委員** 그것은 기업풍토라기보다 기업주라면 어느 누구나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지방에 사학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학들을 어느 정도 단계에서 정리해야만 지방대 출신 고학력 실업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2년 후면 고졸 학생수가 대학정원에 미달합니다. 그런 경우에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곳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

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지방대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태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安泳根委員** 시장논리에 의해서 저절로 퇴화된다는 말씀이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럴 위험성이 많습니다.

○**安泳根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炯昨** 잠깐만요, 지금 이 회의와 관계는 없지만 지금 교육부장관께서 계시니까 질의하는 것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중에 있지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도 대학의 수요가 더 많다면 지방대학의 붕괴 등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파생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金 위원장님, 교육개혁의 기본이 무엇이나 하면 특성과 적성에 맞는 교과과정을 개편하면서 이 사회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화하지 않고서는 대학은 살아 남지 못합니다. 이제 백화점 식의 지방대학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부터 정신차려서 학생이 원하는 것,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특화를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재구조화 소위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하지 않으면 살아 남지 못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炯昨** 그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炯昨** 그러니까 대학자율에만 맡겨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교육부가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맞습니다. 교육개혁의 기본취지가 그것입니다.

○**委員長 金炯昨** 기대해 보겠습니다.

安泳根 위원 계속하세요.

○**安泳根委員** 행자부장관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예방책은 실업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다들 잘 하시겠지만 인천에 대우자동차가 있습니다.

오늘도 GM에서 대우자동차를 인수협상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항상 그렇듯이 GM은 인수하려는 듯 하다가 말고 그런 것이 반복되어 어떻게 보면 약올림을 당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1,727명이 정리해고되었고 앞으로도 정리해고는 이어지리라 봅니다. 하지만 사고를 전환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대우자동차를 살리면 실업률도 줄고 노사갈등도 없어지고 노와 정간의 투쟁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그 대안으로 일단 인천광역시 행자부 관할에 있고 인천광역시가 그동안 정성을 들여서 투자한 송도매립지가 있습니다.

현재 약 500만평의 송도매립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우경영진을 만나 보니까 경영진의 의견도 그렇고 제 의견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우자동차를 살리면서 실업률을 줄이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인천시가 송도매립지에 있는 약 100만평의 땅을 대우자동차에 현물출자하고 준공업지로 되어 있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땅 34만평을 주거용지로 전환하면 땅값이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우부채를 일부 갚고 새로운 공장을 송도매립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현재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같은 경우는 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M이나 매각의사를 가진 곳은 대우자동차를 매입할 경우에 군산이나 창원공장은 그대로 인수하되 인천 부평공장은 폐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고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인천지역에는 더 많은 실업자가 양산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장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우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해서 송도매립지 100만평을 현물출자하고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34만평 토지를 용도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고 그 계획의 진전사항을 사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알겠습니다.

○安泳根委員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아 들으셨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알겠습니다.

○安泳根委員 그리고 이어서 제가 신임 장관께

답변하기 불편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우차와 관련해서 지난 4월10일에 폭력진압으로 인해서 유혈사태가 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 갔었고 현장에서 떠난지 10분 후에 진압했었는데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기호라는 경감입니다.

이분한테 책임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라고 했어요. 경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위의 책임자는 모른다고 했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강원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떠난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왜 강원청에서 인천으로 왔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그 당시 인력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청장이 인력을 운용할 때 타 도의 인력도 쓸 수 있습니다.

○安泳根委員 그 당시 그곳에 배치한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경감은 모른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그 당시 현장책임은 부평서장한테 있습니다.

○安泳根委員 그렇다면 그것을 봉쇄한 책임자도 부평서장인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현장총괄책임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전을 하는 책임은 각 현장의 소대장들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泳根委員 그러니까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봉쇄하도록 명령한 책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제가 보고받기로는 봉쇄하도록 명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泳根委員 아니지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봉쇄시켰다는 이쪽 청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날 산곡성당에서 대오를 지어서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는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위를 저지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安泳根委員 이것은 실업문제하고 틀린 얘기지만 그러면 청장께서는 허위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원래 그 전날 4월6일인가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에서 내려온 결정서를 노조원이 들고 왔습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존경하는 安 위원님과 이

야기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安泳根委員 그런데 그날 다친 분들이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당해서 실업상태에 있지만 노동조합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다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답변하기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업특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행자부장관께 질의드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경찰의 명령체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날 현장에서 부평서장을 만났는데 부평서장은 범죄예방차원에서 노조원들의 노동조합 출입을 봉쇄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인천청장을 만났습니다. 인천청장은 지금은 직위해제 당했는데 자신의 강렬한 의지로 노사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어감으로 보았을 때 저는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봉쇄한 명령체계가 인천지방청장이 아닌 그보다 윗선에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결국은 억울한 사람이 직위해제 당한, 그야말로 경찰의 명령계통·지휘계통에서 열심히 복무한 사람이 직위해제 당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우리 경찰들은 불법시위를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불법시위하는 과정에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安泳根委員 불법시위가 아니라 이 결정문이 4월6일에 나왔는데 4월6일부터 노조원들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려고 개별적으로 현장에 갔어요. 이 법원의 결정문을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에서 경찰 수백 명이 막고 있으니 당연히 사람은 한 명, 두 명 늘어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노조원들의 시도가 2, 3일 경과하면서 모인 사람들의 규모가 커진 것이지 그 시위의 출발점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그랬다는 것은 처음부터 경찰이 불법시위를 유도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고 처음부터 법원의 결정문을 가지고 들어가는 노조원을 막았다는 것 자체가 경찰이 사법경찰이 아니라 소위 불법경찰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법원의 결정문 자체는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소위 기업이라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당사자간의 문제이지 경찰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安泳根委員 그러면 왜 경찰이 봉쇄합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고되지 않은 집회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 시위 자체를 막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安泳根委員 그러면 4월10일 전전날은 왜 막았습니까? 개별적으로 몇 명씩 가는 것을 입구에서 막았거든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그날은 그 상황이 시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장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安泳根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하고 앞으로 이 투쟁이 5월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春鬪로 이어집니다.

노사간의 갈등, 노정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더구나 현재 100만이 넘는 실업자들의 엄청난 투쟁과 시위에 대해 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행자부장관께서는 유혈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安泳根委員 예, 말씀하십시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합법적인 시위는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노사간에 화합이 되어서 우선 대우만 하더라도 대우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겠고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되어서 결국은 다 못 살게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스럽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 얘기가 나왔기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그 일을 저지른 대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 전경들도 다 우리 자식들입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생치안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安泳根委員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이 격앙된 시위문화가 있게 되면 과거 80년대 중반에 분신사태가 자주 있었는데 그야말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격앙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분신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물론 전경들도 애로사항이 다 있겠지만 장관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여하튼 저희들도 최루탄을 절대 쏘지 않을 것이고 합법적인 시위는 절대 보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炯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昌達 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昌達委員 한나라당 朴昌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에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이 실업대책특위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 회의가 열릴 때 우리 한나라당은 100% 다 참석했는데 정말 이 정권을 이끌어갈 여당은 참석률이 기가 찹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될 민생문제의 일환인 실업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朴仁相 간사와 여당에서도 모두 다 나와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민생문제, 실업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曹喜旭委員 위원장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벌어진 것입니다. 위원장은 각성해야 돼요.

○朴昌達委員 위원장께서도 많은 참여가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먼저 행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행자부에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자치행정국장입니다.

○朴昌達委員 혼자 와 계십니까?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저희 직원들도 같이 와 있습니다.

○朴昌達委員 어디 있습니까?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河在龍 실

업대책과장입니다.

○朴昌達委員 앉아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관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 장관께서 자리에 잘 앉아 계실 수 있고 어려울 때 모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행자부의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 가지고 도저히 질의할 것도 없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행자부에 공공근로사업 3년간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 이월액이 654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이월액이 1,201억원입니다. 또 2000년도 이월액이 733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떻게 해서 가장 계획적이고 치밀해야 할 행자부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이월시켰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었고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947억9,800만원 중에서 4,944억6,800만원이 집행되고 3억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집행이 되고……

○朴昌達委員 지금 무엇을 말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98년도……

○朴昌達委員 98년도 예산이 7,800억원입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98년도 행자부소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98년, 99년, 2000년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집행되었고 2억9,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예기치 않은 재해발생시 보상해 주기 위해서 당초 예산의 0.5% 이내를 재해보상 유보비로 책정했습니다마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의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예기치 않은 재해발생시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노동강도가 비교적 높은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산재보험에서 이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주인 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우리 부에서는 항상 당초 예산안의

0.5% 이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보상 유보비로 책정했는데 99년의 경우는 재해보상 유보액이 1억2,300만원……

○**朴昌達委員** 지금 제가 묻는 말과 다릅니다. 98년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의 전체예산이 국비, 지방비해서 7,80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654억원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다시 물기로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담당국장께서는 세밀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다음에 3년간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98년 7,800억원, 99년 1조5,777억원, 2000년 9,00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이 1조5,000억 정도로 98년의 약 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99년에 계상되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0년4월이 16대 총선입니다. 여기에 대한 선심사업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썼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처에 관한 것이니까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자치행정국장이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에 1조5,00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계획되었던 것은 실업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9년도가 제일 높고 실업상태도 상당히 고실업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초 예산은 국비를 3,995억밖에 국회에서 계상해 주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가 상당히 고실업 상태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628억원을 집행했고 추경도 그때 국회에서 6,300억원이라는 예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그때 1조5,000억을 지원하고 단기 일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朴昌達委員** 또 하나는 2001년3월말 현재 4,720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다 했는데 후반기 계획이 어떻습니까?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 올린 대로 60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반기에 한 70% 예산을 배정하고 하반기에 30%로 했던 것은 노동연구소를 비롯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의 실업률이라든지 동향이 전반적으로 한 3.7% 그리고 1/4분기, 2/4분기는 계절적인 요인, 작년 연말의 4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상반기의 실업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따른 예산배정계획을 상반기에 한 70% 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상과는 달리 실업률이 1/4분기만 해도 4.8%의 고실업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하반기의 공공근로사업예산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朴昌達委員** 일단 하반기의 예산집행내역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3년간에 걸쳐서 월별, 시·도별 예산집행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세요.

○**行政自治部自治行政局長 金之淳**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昌達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炯昨** 朴昌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일단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金樂冀 위원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金樂冀委員**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실업대책 위원회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安泳根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다소 하셨는데 제가 환노위 소속이기 때문에 행자부장관님을 개인적으로 뵐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회의장에서 뵙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물을 테니까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金樂冀委員** 대우차 유혈폭동진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집행하는데……

○**曹喜旭委員**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대책 현황보고이지 대우차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은 양해를 구하고 물론 金樂冀 위원의 충정 어린 뜻은 알겠지만 오늘은 순수하게 실업대책에 관하여 절박한 사항만 보고를 듣고 보충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긴급동의하는 것입니

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金炯昨 金樂冀 위원께서 먼저 입장을 말씀하시고 내가 얘기할게요.

○金樂冀委員 제가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묻지 않아야 정상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을 공식적으로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의문 나는 것을 묻고 대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물으면 되는데 曹喜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깜박 잊었습니다마는 아까 민주당 朴仁相 간사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자민련의 曹喜旭 간사님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曹喜旭委員 나는 이 문제는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관한 질의시간이니까 실업대책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세요.

○委員長 金炯昨 安泳根 위원께서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우사태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양해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金樂冀 위원께서 이것을 준비해 왔는데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겠다고 했으니까, 曹喜旭 위원께서 이것이 실업대책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대우사태문제가 현안문제로 되어 있고 또 한 분 위원께서 이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이 봉쇄된다면 이것 역시 의사진행의 불공평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曹喜旭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金樂冀 위원께서는 曹喜旭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감안하셔서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절히 조정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曹喜旭 위원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樂冀委員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정당한 집행인데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저지하게 된 법적 근거와 노사문제 주무부처인 노동부와의 협조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폭력진압의 발단이 경찰측에서는 열두명의 경찰관 구출을 위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 주

장은 우호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였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황이 아니었다, 무장해제를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담배도 피우고 물도 갖다 주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잉진압실태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의 표시로 상의를 벗고 드러누워 있는 순간에 와서 일방적으로 가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잉진압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진압지휘 책임자문제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평경찰서장에게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장관께서는 이 사태를 언제, 어디에서 보고 받으셨는지와 그렇다면 경찰청장이 진압지휘의 최종 책임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혈진압 소요시간도 경찰이 주장하는 것과 현장에 있었던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경찰은 46초 사이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은 3분 내지 4분이 걸렸고 골목길까지 쫓아가면서 추격 폭행한 시간까지 하면 10분에서 15분까지 걸렸다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자 수와 입원환자 수도 다릅니다.

경찰은 부상자 40명에 입원환자 14명으로 발표했고 노조측은 부상자 92명 입원환자 26명 그 중 중상자를 6명으로 발표하고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훈 변호사가 선동했다고 하는데 저도 VTR에서 봤습니다마는 ‘죽지 않을 만큼 때려라’하는 발언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후는 편집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박훈 변호사를 인천 산곡성당에서 직접 만났는데 박훈 변호사는 ‘경찰이 이탈되어서 개인적으로 나왔을 때는 공권력이 아니고 자연인이다, 개인이다,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서는 덮어놓고 경찰한테 대들지 말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노조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또 그 사건현장에 있었던 자동차 정비업소의 노계영씨라는 민간인이 경찰한테 폭행을 당해서 지금 입원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성당 난입사건에 대해서 양주동 부제 폭행 및 제의실 난입배경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다 기록이 안 되었으면 임시회의록을 행자부측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炯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의 실업대책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崔榮熙 위원께서 일괄질의하시고 일부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서면답변이나 서면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측은 소관 부처별로 빠른 시일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모두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총리, 행자부장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대졸 실업자문제, 청년 실업문제, 공공근로사업의 여러 문제점, 교육과 취업의 연계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되었습니다. 오늘의 질의나 답변이 일과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 누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통계자료의 부실과 부정확성, 부처간 통계의 혼선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업특위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런 것만이라도 반드시 시정해서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와 통계의 신뢰성은 바로 정부의 신뢰성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부총리와 행자부장관께 감사드리고,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나왔던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후 성실히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지난 4월6일 우리 위원회의 2차회의를 마치고 위원장과 간사위원들간에 향후 우리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관해서 논의한 바, 우선 오는 30일에 가까운 영등포 지역의 노숙자쉼터, 무료급식소, 행려병자 무료진료소, 고

용안정센터 등을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에 필히 참석하시어 실업자들의 고통받는 현장을 생생하게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실업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出席委員(12人)

金樂冀	金文洙	金榮春	金允式
金炯昨	朴仁相	朴昌達	安泳根
尹斗煥	林仁培	崔榮熙	曹喜旭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姜長錫
전문위원	李昌熙

○行政自治部參席者

장관	李根植
자치행정국장	金之淳
실업대책과장	河在龍

○教育人的資源部參席者

장관	韓完相
기획관리실장	李基雨
학교정책실장	李相甲
평생직업교육국장	金京會
대학지원국장	具寬書
교육자치지원국장	金坪洙
인적자원정책국장	鄭冀五